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에 관한 연구

이성민

(재)대화문화아카데미

이수철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이 글은 빈곤연구의 기초가 되는 빈곤의 학문적 개념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빈곤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온 쟁점을 사안별(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 적용의 차이, 빈곤의 측정단위와 연구단위,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지출, 각종 빈곤지수별 차이)로 검토하면서, 더 충실한 개념화를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 학계의 빈곤 개념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이나 지출을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에 대해 빈곤을 대안적으로 개념화하는 필요성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따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연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빈곤의 누적적 흐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극빈층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대안적 개념화를 통해 빈곤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빈곤에 수반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주제어: 대안적 개념화, 다차원적 빈곤, 누적적 빈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RF-2010-413-B00024).

I. 서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재등장했다. 재등장이라는 것은 이전의 양상이 반복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의 양적 성장으로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실업의 경우, 1997년 1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주로 하층 노동계급에서 실업자가 120만 명 이상 발생했다(신광영, 2004: 232).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증가하면서(신관호·신동균, 2007: 87),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빈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정책적 차원에서 단순히 절대적 빈곤선을 연구하던 빈곤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연구 방향은 빈곤의 측정과 현황에 대한 연구(김미곤·김태완, 2004; 김교성·김성욱·이정면·노혜진, 2008)는 물론,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대한 연구(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금재호, 2006; 지은정, 2007)도 활발했으며, 세대간 빈곤이행에 대한 연구(김위정·김왕배, 2007), 빈곤의 여성화 가설 연구(김영란, 2006; 홍백의·김혜연, 2007; 김은하, 2008), 빈곤의 노인화 가설 연구(박능후·송미영, 2006), 노숙자에 대한 연구(남기철, 2000; 윤경아·노병일, 2005)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빈곤 연구의 다양화는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부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종합된 구조적이자 개인적인 문제로, 복합적 인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방향성의 연구 성과는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추세와 원인, 그리고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여,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의 결정요인이나 탈출요인, 빈곤에 취약한 사회적 집단 등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자들마다 분석대상이나 방법 등은 다를지라도, 빈곤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완화하고자하는 학문적 시도이자 기여로 이해할 수 있다. 정확한 현실 파악과 원인 분석은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이러한 연구에서 출발시점에서 맞부딪치게 되는 문제는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빈곤의 정의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빈곤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정의되었고, 이에 따른 혼란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개념을 따르기도 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지출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의 빈곤만이 아닌 사회적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대안적으로 빈곤을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빈곤의 기준은 빈곤의 개념화가 결코 쉽지 않는 사실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다.

“내가 이해하기에 필수품은 생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화뿐만 아니라, 관습상 최하위층의 사람일지라도 그것 없이는 신망 있는 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재화이다. 예컨대 린넨 셔츠는 엄밀히 말해서 생활필수품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신망 있는 일용 노동자라면 린넨 셔츠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기에 남부끄러울 것이며, 린넨 셔츠가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Smith, 1776)

위에서 인용한 아담 스미스의 빈곤에 대한 정의는 빈곤을 측정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함축하고 있다. 빈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화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외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들이 없는 혹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는 언급은 여러 차원으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인용문을 조금 확대해석 해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화’의 양과 종류가 얼마 만큼이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러한 사실에 바탕을 둔다면 빈곤을 개념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 연구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빈곤을 개념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학자들도 빈곤 개념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정의하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념화의 어려움과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딜레마에서 학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빈곤에 대한 정의가 학계에서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방식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빈곤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마다 각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학계의 관행이 실제로 빈곤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방법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빈곤의 측정방법이 사회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떠한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빈곤층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즉 어떤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세부 하위 항목에 대해 쟁점별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을 개념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서 연구를 위해 빈곤을 개념화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빈곤 측정의 쟁점들

김교성과 그 동료들(2008: 315)이 비판하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빈곤을 계측할 때, 단일 자원, 특히 소득을 측정하는 것으로만 빈곤을 측정하는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빈곤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다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설정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글은 빈곤 측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빈곤의 개념도 더욱 풍부해져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서 빈곤을 계측하는 방법도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빈곤 개념을 더 정교하게 포착하고자 학문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빈곤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연구 성과를 충분히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몇 가지 쟁점별로 빈곤을 개념화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1.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빈곤을 측정하는데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절대적 빈곤 개념은 라운트리(Rowntree)가 1899년 York시 조사에서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만 필요한 최저수준을 확보하기에도 불충분한 가구’를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이라고 규정한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여유진 외, 2005: 63).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이후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 바로, 최저수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타운센드(Townsend, 1970)는 생존에 필요한 최저수준과 사회적 기본 욕구(social basic needs)가 합의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이후 학계에서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는데, 이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통 상위 극단 값들의 영향을 받아 평균 소득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다)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40%~60% 이하를 빈곤층으로 규정하거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위 10%~20%를 빈곤으로 정의내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비판은 어떤 사회의 중위 소득이나 평균 소득이 높을 경우, 그의 절반이나 40%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이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의미에서 빈곤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비판은 소득 분포 하위 10%~20%로 결정하는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몇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절대적 빈곤 개념이 더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정부에서 2000년부터 매

년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항목을 정해 그에 대한 가격을 매년 물가인상률에 비례하여 인상하여 결정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선정한 품목과 각 품목을 이용하는 가격이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는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상대적 빈곤개념이 지닌 단점은 통계조사에도 비롯된다. 빈곤연구를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진행할 경우 전국단위의 대규모 통계자료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응답자가 보고한 임금소득, 부동산 소득, 금융 소득 등을 기반으로 가구별, 개인별 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그런데, 통계조사를 받을 때 보고하는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체계적으로 낮다는 관찰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1년 이상 추적된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경우 소득이 하향신고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현주 외, 2008: 8). 이 경우, 중위소득이나 평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소득 하위계층의 경우에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일부 누락하여 빈곤층이 과대 추정되는 단점도 있다.

또한, 빈곤의 국제비교연구를 할 때에도,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다면 사회마다 다른 빈곤선을 설정하여 비교의 의미가 반감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최빈국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빈곤 개념을 설정하는데 있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수준에 대해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 필요한 재화를 찾는 다음, 그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인 검토를 거쳐 빈곤을 개념화하는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 빈곤 측정 단위와 연구 단위

빈곤을 개념화할 때 해결해야할 다른 쟁점은 빈곤을 측정하는 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빈곤은 각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구 단위로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가구단위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만일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같은 빈곤 가

구에 속한 가구원이라도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은 빈곤층이 아닌 반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나머지 가구원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총소득을 공유하는 개인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가구소득을 공유하는 개인이라는 점에는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쟁점이 남는다. 가구균등화지수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가구 균등화 지수란, 가구원 수가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나누는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성인과 아동 구분 없이 가구원 수에 제공근을 취해 나누는 방식과, 성인과 아동에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마찬가지로 제공근을 취하는 방식, 최소한의 영양학적 필요를 고려한 방식(암스테르담 지수, Orshansky 방식) 등이 있다(여유진 외, 2005: 79). 성인에 비해 아동에 더 적은 가중치를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가구균등화 지수가 낮게 설정되어 그 지수로 나누게 되면 가구균등화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소득수준이 같은 두 사회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가구균등화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빈곤층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OECD 등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방식은 성인과 아동 구분 없이 가구원 수를 합산하여 제공근을 취해 나누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취하여 성인 1명에 대해서는 1, 추가되는 성인에 대해서는 0.5,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0.3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즉, 보육비가 많이 드는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가중치를 0.3으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측정 단위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구단위를 가구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전통적으로 한 사회의 빈곤율이라고 할 때는 빈곤 가구율이 아닌 빈곤 인구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빈곤 연구를 할 때에도 가구소득에 기준을 둔 개인, 즉 그 개인이 속한 가구가 빈곤을 탈출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이 빈곤에 탈출한 것이 되는 방식으로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연구(구인회, 2005; 지은정, 2007 등)들이 많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에서 개인의 변화가 그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의 실직과 배우자 혹은 성인 자녀의 실직은

한 가구의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다면, 성인 자녀가 실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구주의 고용지위가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수준이 높아진 가구는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한 경우,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할 경우 그 성인 자녀는 실직을 함으로써 오히려 빈곤을 탈출하게 되는 모순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가구소득을 공유하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가구 내에서 어떤 지위인지, 가구주인지, 배우자인지 등에 따른 구별이 세밀하게 적용되어야 더욱 정확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3. 소득과 지출, 그리고 그 범위

빈곤을 측정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지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지출은 가구나 개인에 따라서 상대적이므로,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론상 결함이 있다. 그러나 학계에는 지출을 기준으로 빈곤 연구를 진행한 사례(서병수, 2007: 210)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례에서 사용한 한국노동패널(KLIPS)의 총소득이 어떤 해에는 급증하였다가 다음 해에는 평균수준으로 돌아오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매년 빠지지 않고 응답한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이는 비단 노동패널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득조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향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반해 지출은 항목별로 비교적 충실히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빈곤층만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지출 수준이 소득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즉, 상층의 경우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지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하층이나 빈곤층의 경우는 한 가구가 지출하는 규모가 그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과도한 빚을 통해 지출 규모만 높은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소득에 관한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누락되거나 왜곡되었을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지출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편이 위에서 언급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더 분명하고, 정확하다. 그런데, 소득 중

에서도 어떤 소득을 포함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과 폐품매각대금 및 기타 비경상소득을 포함한다. 비경상소득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조의금이나 축의금, 퇴직금, 손해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이나 오락기에서 단상금, 장학금 등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경상소득 보다는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OECD등이 따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르자면, 한국의 경상소득에서 일정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OECD는 몇 가지 방식으로 소득을 분류하고 있는데, 먼저 1차 소득(primary income)이라 함은, 경상소득에서 일체의 이전소득이 제외된 금액이다. 그리고 1차 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하면 시장소득(market income)이 된다. 우리의 경상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은 총소득(gross income)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소득에서 소득세와 각종 사회보장 부담금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 개념이 있다.

이러한 각종 소득 기준 중에서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는 연구자에 따라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미곤과 김태완(2004)은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였는데, 최저생계비가 세금을 제한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도 역시 세금이나 사회보장 부담금 등을 제하지 않은 경상소득을 적용해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점에서 경상소득을 사용했으며, 이에 반해 국제 비교를 할 때에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빈곤지수 산출 방식²⁾

빈곤을 측정하는데 있어 더욱 정교함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된 각종 지수들이 있다. 이러한 지수들은 모두 다른 이론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며, 이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지수로는 전체 인구 중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빈곤율이 있다. 이 지수는

2)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유진 외(2005: 84-89)를 주로 참고하였다.

직관적으로 명료하고 단순하여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빈곤층 내부에서도 빈곤이 심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HR(y, z) = \frac{q}{n}$$

위는 빈곤율을 측정하는 식으로, HR은 빈곤율(headcount ratio), y는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 z는 빈곤선, q는 빈곤선 이하 인구(혹은 가구)수, n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나타낸다.

두 번째로 빈곤갭 비율이다. 위에서 소개한 빈곤율이 빈곤의 박탈 정도를 측정할 수 없는데 반해, 이 지수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지수라고 볼 수 있다. 빈곤갭이란 빈곤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차액을 각 개인마다 계산하여 모두 더한 값을 총 빈곤갭으로 보고, 이를 개인이나 가구 수에 빈곤선 금액을 곱한 액수로 나누면 빈곤갭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 지수는 빈곤의 심도는 측정하지만, 규모는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빈곤이 극심한 소수의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고 빈곤이 심하지 않은 다수의 가구가 새로 발생했을 경우, 지수 상태는 오히려 나아질 수(즉, 지수값은 낮아질 수) 있지만, 그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PGR = \frac{\sum_{i=1}^q (z - y_i)}{zq}$$

위 식에서 PGR은 빈곤갭 비율, z는 빈곤선,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 q는 빈곤선 이하 개인(혹은 가구)수를 나타낸다.

세 번째로, 센 지수가 있다. 이 지수는 Amartya Sen(1976)이 제안한 지수로서, 기존의 빈곤율과 빈곤갭 지수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여기에 저소득층의 분배상태를 고려한 변수를 추가하여 구성한 지수다.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P = H[I + (1 - I) \times G_p]$$

위 식에서 H는 빈곤율(headcount ratio), I는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 혹은 빈곤갭 비율)을 의미하며, G_p 는 저소득층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다. 즉, 빈곤율, 빈곤갭(소득갭), 저소득층의 분배상태 모두를 고려한 지수로서, 이 중 한 가지만 증가해도 전체 지수는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FGT 지수가 있다. 이 지수는 Foster, Greer, Thorbecke이 1981년에 제시한 지수이며, 이 지수는 다른 지수들과 달리, 빈곤혐오감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α 가 있어 이 값이 커질수록 빈곤에 더욱 민감한 지수가 된다. 이 지수는 센 지수와 같이 빈곤의 심도와 규모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FGT_\alpha = \frac{1}{n} \sum_{i=1}^q \left[\frac{z - y_i}{z} \right]^\alpha$$

위 식에서 n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 q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혹은 가구)수, z는 빈곤선,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i의 소득, α 는 빈곤혐오감(poverty-aversion)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식에서 파라미터 값을 0으로 설정하면, 빈곤율 지수와 같은 식이 되며, 1로 설정하면,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곱한 식이 된다.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UNDP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파라미터 값을 2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빈곤율, 빈곤갭 비율은 물론 빈곤층의 분산계수와 함수관계가 성립되어, 센 지수와 비슷하게 빈곤의 심도와 규모, 분배 상태까지 민감하게 측정하는 지수가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수를 통한 빈곤 개념화 방법은 점차 정교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한 사회나 국가의 빈곤 상태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수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쟁점들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빈곤층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빈곤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즉, 위에서 검토한 세 가지 쟁점은 빈곤층과 비 빈곤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다면, 빈곤지수는 전체적인 빈곤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이상에서 살펴본 빈곤 측정의 여러 쟁점에서 보듯이, 빈곤을 정의내릴 때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빈곤을 측정하는 어느 시점에서 그 개인이나 가구가 보유한 자원의 양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단선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빈곤 개념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개념을 중층화하는 대안적인 개념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

빈곤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포괄적인 생활세계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차원을 선정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차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이론적, 실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는 빈곤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빈곤은 시간축을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생애사는 물론, 세대 간 이행에 이르기까지 빈곤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이다. 마지막으로 빈곤층 내부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다. 단지 빈곤층과 비 빈곤층을 구분하는 것은 빈곤연구를 단순화하고, 그 함의를 제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층 중에서도 극빈층을 개념화하는 작업은 빈곤을 더 적실성있게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래에서는 빈곤개념을 수평적, 수직적, 내부적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차례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다차원적 빈곤개념

빈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인 박탈이나 배제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갑’에게는 1,000원이 충분치 않으나 ‘을’에게는 1,000원도 충분할 수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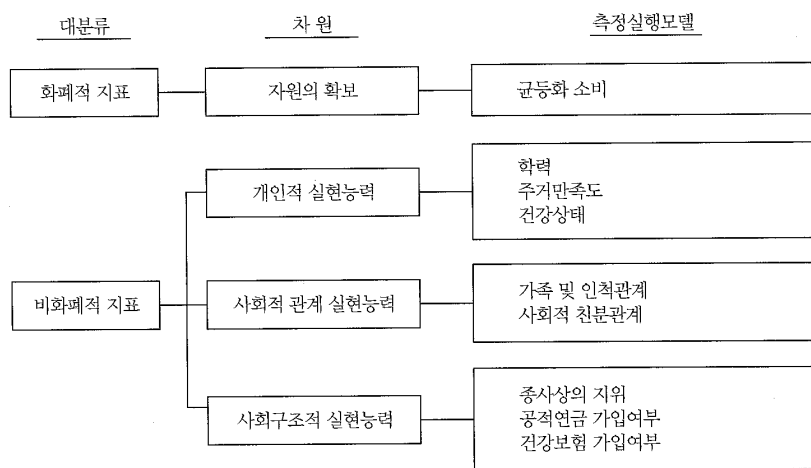
며, 돈은 많으나 장애 등의 신체 능력부족으로 사회생활을 못하여 가진 돈을 소비만 해야 할 경우, 현재 돈이 적은 사람보다 빈곤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또 가족 간 만족도가 높고, 자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회적 지지가 충분한 사람과 가정과 사회에서 배제되어 심리적, 사회적 결핍을 겪는 사람이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다 하여 복지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면 이는 다소 부당하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남성의 노동 조건보다 심각하게 열악할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남성 가장과 여성 가장에 비슷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는 여성 가장이 속한 가정이 빈곤을 탈출하는데 불리하다. 이처럼 현재 상태에서 돈이 많다/적다로 빈곤하다/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빈곤의 정의도 그러므로 경제적인 상태는 물론 다차원적인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대표적인 학자로 Amartya Sen을 들 수 있다. Sen에 있어 가능성이란 자신의 운명을 정하는 능력으로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성취하는 실질적 기회이므로 자유(최균 서병수, 2006: 337)이며, 이런 가능성의 기본적 실패 상태를 빈곤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빈곤을 인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결핍으로 인식하므로, 빈곤을 측정하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도 지금까지의 경제적 접근과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빈곤을 다차원적인 실현능력의 결핍으로 이해하려는 Sen의 문제의식에 동조하여 결핍 정도를 측정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뒤따랐는데(Finnis, 1980; Clark, 2000; Doyal & Gough, 1991), Alkire(2002)와 Gasper(2004) 등은 Doyal & Gough의 기본욕구 일람표가 측정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서병수(2007)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서병수는 기본욕구 일람표 등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화폐적 지표(경제적 측면)와 비화폐적 지표(비경제적 측면)를 구분하고, 비화폐적 지표를 개인적, 사회적 관계, 구조적 실현능력으로 세분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빈곤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결핍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폐적 결핍과 비화폐적 결핍의 교집합과 합집합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현저한 빈곤(교집합)과 잠재적 빈곤(합집합) 등을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그는 노동패널(1999~2003)자료를 퍼지집합이론으로 분석하여, 현저한 빈곤율은 조사 기간 중 평균 26.3%에 이르고, 잠재적 빈곤율은 51.2%에 이르며 또, 빈곤을 경험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1~2년 내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비화폐적 결핍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머무는 성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분석을 넘어서 인간의 총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박탈의 수준을 측정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노동패널을 활용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지표



다음으로, 박경숙(2008)의 연구를 보도록 하자. 박경숙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복합적 수준의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선정하였다(<표 1> 참조).

〈표 1〉 빈곤의 다차원적 측면구성 예시

구분	박탈의 차원	하위 차원
1	경제	- 평균가구소득 대비 소득 - 절대빈곤 - 경제적 압박 - 미래 소득 전망
2	건강	- 인지 - 이환
3	교육	- 평균교육수준 대비 교육수준
4	노동	- 취업 - 노동의 질 - 사회보험 가입율
5	가족	- 자녀관계 - 부모관계 - 부부관계 - 가족갈등
6	복지	- 의료, 소득보장 - 자활 - 서비스
7	지역공동체	- 편리성 - 연대/참여
8	사회적 관계	- 정서 - 자원
9	자아통합	- 주관적 안녕 - 자아통제력 - 불평등의식 - 정치소외

이러한 측면의 구성은 그 자체로 박탈이 얼마나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여러 측면에서의 박탈이 경제적인 측면의 박탈과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이며, 이런 점에서 빈곤을 경제적인 의미에서 좁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측면의 박탈을 고려한다면 더 역동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박경숙(2008: 117)은 위의 9개 측면에 대해 각각 박탈의 수준을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측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 교육, 건강, 노동, 사회관계, 자아의식 사이에는 강한 상관 순환적 관계가 존재

했으며, 이를 박탈의 그물망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반면, 가족과 복지의 측면은 경제적 측면의 결핍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박경숙은 경제, 교육, 노동, 자아 측면에서 강하게 직조화된 박탈의 그물을 지적하면서, 빈곤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점을 논증하고 있으며, 가족과 복지 효과가 낮은 점을 통해,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유대는 다른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복지 효과가 낮은 점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석을 더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면, 빈곤에 이르는 과정이나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분석, 빈곤의 효과와 같은 부분까지도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은 통계 자료를 활용한 연구나 질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한 연구에서도 모두 가능하였으며,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배제에 관련된 연구도 넓은 측면에서 이러한 다차원적인 빈곤연구에 속한다. 빈곤의 양상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진행(Atkinson & Davoudi, 2000; 박병현·최선미, 2001; 국가인권위원회, 2004)된다는 연구가 학계에 보고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2004)는 주거, 노동,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를 분석하며, 각각의 빈곤화 메커니즘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시연구소(2006)는 빈곤의 원인과 양상을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영역에서 분석하고, 빈곤계층별로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탈북자, 과중채무자, 저소득층 청소년 등으로 세분하여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2. 빈곤화의 누적적 흐름

빈곤은 누적적 흐름을 따른다. 즉, 생애 초기에 시작된 빈곤위험이 이후 청년기에 가중되고, 이러한 위험이 극복된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찾아오는 위험으로 인해 다시 빈곤에 처하기도 한다. 즉, 생애 전반에 걸쳐

빈곤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쌓여가고, 그로 인해 빈곤해지는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성민(2009: 929)은 국가인권위원회(2004) 자료를 바탕으로 빈곤화 메커니즘의 누적적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생애 초기 가정불화, 빈곤, 장애 ⇨ 1차 위기(부모 질병과 사망, 노름, 가정폭력, 부모 이혼, 사회적 부족, 사회적 위기 등) ⇨ 교육 부실(학업 중단, 포기, 부적응) ⇨ 수익성 낮은 일자리로 진입하여 개인 노력으로 극복 시도(단순노동부터 기술습득시도) ⇨ 사업실패, 신용불량, 사회적 위기, 질병, 이혼 등 위기재발 ⇨ 가정파탄, 주거지 배제, 건강 악화로 만성 빈곤화

이 과정을 일반화하여 네 가지 빈곤화 메커니즘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각각 1) 생애초기 한계상황, 2) 누적된 실패경험, 3) 가족으로 확산된 위험, 4) 중첩된 사회위기다. 즉,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빈곤이 세대 간 이행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교육과 보육 측면에서 한계 상황으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걸쳐 사업과 결혼 등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해 다시 위기를 경험한다. 여기에 IMF와 같은 사회 위기가 중첩되면서 다시 한 번 위기에 빠진다.

이러한 흐름은 빈곤화 위험이 누적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빈곤 연구에서도 바로 이런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로 세대 간 빈곤이행에 관한 연구(김위정·김왕배, 2007)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빈곤지위, 본인의 학력과 노동시장 지위, 가구주의 성별 등이 빈곤이행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빈곤이 세습될 경우는 만성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빈곤에 대한 연구를 세대 간 이행 효과를 고려하면서, 한 개인 내에서도 전 생애에 걸친 역사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 빈곤층의 직업력에 대한 연구³⁾에서와 같이 어떠한 생애 과정을 거치면서 빈곤해졌

3) 최옥금(2008)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 중 중고령자(40세 이상~65세 미만)를 대상으로 성별을 분리하여 직업력을 연구하였다. 먼저, 남성 207명 중 50명은 기술공이나 준전문가 직종(이 글에서 사용하는 계급범주에 따르면 기술/준전문계급), 사무직(사무/판매계급), 기능

는지에 대한 관점이 빈곤을 개념화하는데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차 빈곤, 2차 빈곤, 최종빈곤과 같이 빈곤개념에 시간적 흐름을 명시한다거나, 생애 중반 가족으로부터 전이된 빈곤, 생애 후반 사회로부터 중첩된 빈곤과 같이 생애사적 흐름과 빈곤위험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같이 표기함으로써 빈곤개념을 더욱 중첩적이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

3. 극빈층의 개념화

마지막으로, 극빈층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빈곤에 머무는 시기를 연구하여 만성빈곤이나 단기 빈곤을 구분하는 연구사례(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등)들은 발견되지만, 극빈층을 학문적으로 개념화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들어 극빈층(중위소득 25%)과 빈곤층(중위소득 50%)을 구분하여 각각의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손병돈, 2010)와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극빈층을 세분하여 분석한 연구(이성민, 2010) 등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개념화한 극빈층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극빈층을 설정한 기준도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 통상 상대적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하는데 착안하여, 그 절반인 25%를 극빈층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구분은 다분히 자의적이다. 그러므로 극빈층을 개념화하여 빈곤을 더욱 정교하게 개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극빈층을 개념화할 때에 고려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인 빈곤 개념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측면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를 고려하고, 몇 가지 차원이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한 측면의 누적적인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생애사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생애 초기에

원 및 관련기능 직종(숙련생산계급)에 계속 근무하면서 빈곤해졌고, 나머지 157명은 농어업에서 종사하다가 단순노무직(미숙련생산계급 혹은 미숙련서비스계급)이나 판매직(사무/판매계급)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판매직(사무/판매계급), 장치기계 조작직종(미숙련생산계급), 농어업, 단순노무직 등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226명 중 13명은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여 계급이동이 없었고, 91명은 결혼 전이나 후에 일시적으로 서비스업(숙련서비스계급)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였으며, 나머지 122명은 결혼과 출산 후에 서비스업과 판매직, 장치기계 조작직, 단순노무직 등으로 재진입하였다.

처했던 빈곤에 이어, 생애 내내 지속되는 빈곤과 그 과정에서 점차 극빈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포착하여야 한다. 즉, 극빈이 시작된 시간과 지속된 시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같은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더 세분할 수 있다. 셋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층을 개념화한다면, 최저생계비 품목 중에서도 의식주와 같은 기본 재화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즉, 통신비와 교통비와 같은 품목보다 식비가 더 기본적이라는 판단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재화 중에서도 더 필수적인 재화가 부족할 경우, 우선적으로 극빈층으로 개념화 할 수도 있다. 단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부 항목별 분석을 통해 극빈층을 가려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집단을 극빈층으로 개념화해야 한다. 노숙자와 같은 인구집단은 전국단위의 대규모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맹점이 있으나, 이들이야말로 극빈층이라 할 대상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빈곤연구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나, 극빈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빈곤 개념을 내부적으로 중층화하는 작업은 단지, 빈곤층과 극빈층을 구분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두 단계가 아닌 세 단계의 구분도 가능하며, 극빈층이라 할지라도 빈곤 탈출 가능성이 있는 집단과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단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빈곤에 대한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며, 빈곤층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층 내부의 소득이동이나 박탈 수준의 변화 등을 반영한 개념이 도출된다면, 빈곤 연구는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학문적 노력을 통한 현실 개선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4. 대안적 빈곤 개념 수립의 의미

지금까지 기술한 빈곤을 대안적으로 개념화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빈곤을 개념화해온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존 연구의 빈곤 개념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지출 등 한 개인이나 가구가 지닌 자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견해가 나뉜다. 빈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수 재화의 결핍상태라고 잠정적으로 정의내릴 때, 그 필수재화가 결핍된 정도를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경제 수준이 이렇게 낮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 측면에서 결핍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정 하에서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이나, 혹은 가구단위나 개인단위나, 혹은 소득이나 지출이나 등의 쟁점이 생겨나고 얼마나 더 정확히 자원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 기본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소득에 치중된 단일 기준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자원의 총량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로 인한 평균적인 결핍을 추정하는 것은 정확한 측정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필수 재화와 서비스의 결핍을 측정하는 편이 더 나으며, 이러한 결핍의 전 과정을 고려하면서, 몇 가지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결핍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그림 2〉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 방식

기존연구의 빈곤 개념화		대안적 ⇨ 개념화	대안적 개념화	
빈곤 측정 방법	· 절대적/상대적 빈곤, 가구/개인 단위, 소득/지출 범위 등의 쟁점을 거쳐 도출된 경제적 빈곤선 이상과 이하 집단 구분		빈곤 측정 방법	· 기존의 경제적 차원+개인의 가능성(건강, 교육 등)+사회관계 측면의 박탈과 빈곤화의 누적적 메커니즘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
연구 방식	· 경제적 빈곤선 아래 있는 인구 집단에 대한 특징과 변화 양상을 포착	연구 방식	· 다차원적인 박탈과 장기적인 빈곤화 과정, 빈곤층 내부의 이질성을 파악	

빈곤을 대안적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 글에서 제안하듯이, 빈곤의 개념을 수평적으로 늘리게 되면 빈곤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하게 되고, 수직적으로 늘리게 되면 빈곤의 누적적이고 순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빈곤개념을 내부적으로 확장하면, 빈곤층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원의 보유량을 더 정확히 측정하려는 기존의 개념화 방식은 더 정확한 사

진을 찍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 글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개념화 방식은 자원뿐만이 아닌 그 사람이나 가구의 생활세계를 동영상으로 긴 시간 촬영해서 총체적인 박탈상태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과정은 물론, 빈곤층에 머물면서 겪게 되는 변화까지도 일관된 흐름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이 글은 빈곤연구의 기초가 되는 빈곤의 학문적 개념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빈곤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대별되는 주장들은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을 따르거나, 실질적인 자료의 한계 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관점을 대변하였다. 이에 대해 각각의 쟁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더 충실한 개념화를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 적용의 차이, 빈곤의 측정단위와 연구단위,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지출, 각종 빈곤지수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 학계의 빈곤 개념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이나 지출을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에 대해 빈곤을 대안적으로 개념화하는 필요성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따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연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빈곤의 누적적 흐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극빈층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면서, 빈곤을 대안적으로 개념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빈곤에 대한 연구가 한 개인의 특정한 시점과 그 시점에 지나는 자원의 정도에 대한 파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주장이다. 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지출을 기반으로 개인을 단위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한 연구관행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사회적인 측면으로 분석 범위를 넓히고, 한 시점이 아닌 생애사나 세대 간 이행으로 분석 시간을 늘리며, 빈곤선을 기준으로 이하인지 이상인지만을 구별하지 말고,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양상과 같은 빈곤층 내부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포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고려를 반영하여 빈곤을 개념화하면, 빈곤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 더욱 적실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빈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풍부한 이해가 더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새롭고 구체적인 빈곤 개념을 도출하지 못하고, 대안적 개념화의 방향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둘째, 주로 국내 빈곤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인 빈곤연구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셋째, 주로 외환위기 이후에 발표된 빈곤 연구를 검토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빈곤을 개념화해온 과정을 검토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진행될 빈곤연구의 기초 작업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빈곤개념을 수평적, 수직적, 내부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학계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새로운 제안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빈곤화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발견은 축적된 연구 성과에 종합되어 빈곤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그러한 도정을 시작하는 제안서로 쓰이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금재호. (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논집」, 29(1): 41-73.
- 김교성·최 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 김미곤·김태완. (2004). 우리나라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20(3): 173-200.
- 김영미·한 준. (2007).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 소득불평등

- 분해 1998~2005. 「한국사회학」, 41(5): 35-63.
- 김영란. (2006). 한국의 신 빈곤현상과 탈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41-70.
- 김은하. (2008). 근로 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 지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5-29.
- 김위정·김왕배. (2007). 세대 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 남기철. (2000). 노숙자의 사회적 연계단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199-224.
- 노대명. (2006). 노동과 빈곤: 한국 근로빈곤층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소(편). 「한국 사회의 신빈곤」, 88-130. 한울아카데미.
- 박능후·송미영. (2006). 노인 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31: 7-26.
- 박병현·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5): 185-219.
- 서병수. (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28: 199-232.
- 손병돈. (2010). 빈곤심도별 빈곤 결정요인 비교. 「보건사회연구」, 30(1): 3-28.
- 신관호·신동균. (2007).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13(1): 63-123.
-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_____. (2008). 서비스사회의 계층과 계급구조. 신광영·이병훈(공편). 「서비스사회의 구조 변동」. 한울.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윤경아·노병일. (2005). 도시 노숙자의 삶의 질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1): 219-243.
- 이성민. (2009). 빈곤화 메커니즘 연구: 생애초기 한계상황, 누적된 실패경험, 가족으로 확산된 위험, 중첩된 사회위기.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논문집」, 923-933.
- _____. (2010). 장애인 가구의 빈곤화 메커니즘: 편중된 계급분포와 계급의 하

- 장이동. 「한국 장애인재단 2010 장애의 재해석 자료집」, 34-67.
- 이현주·강신욱·김태완·노대명·박세경·손창균·신현웅·이태진·정경희·최현수·김안나·박능후·이선우·홍경준·유진영·전지현·유정예·윤필경. (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 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최최균·서병수. (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측면과 측정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333-362.
- 최옥금. (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분석: 비 빈곤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55-77.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 홍백의·김혜연. (2007).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146.
- Alderson, A. S. & Nielsen, F. (2002). Globalization and the Great U-turn: Income Inequality Trends in 16 OECD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5): 1244-1299.
- Atkinson, R. & Davoudi, S. (2000).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ext,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3): 427-448.
- Corcoran, M. (1995). Rags to Rags: Poverty and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 237-267.
- Doyal, L. & Gough, I. (1991). *A Theory of Human Need*. London: Macmillan.
- England, P. (1992). *Comparable Worth: Theories and Evidenc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Finnis, J. (1980). *Natural Laws and Natural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 Haggard, S. (1990). *Pathways from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Cornell University Press.
- Sen, K. A. (1976).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44(2).

- Smith, A. (1776). *The Wealth of Nations*. (유인호 역. 2008. 「국부론」. 동서문화사).
- Townsend, P. (1970). *The Concept of Poverty*.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
- Weber, M. (1968). *Economy and Society*. Bedminster Press.
- Wright, E. O. (1984). A Gener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lass Structure. *Politics & Society*, 13(4): 383-423.
- _____. (1985). *Classes*. London: New York: Verso.

이성민: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재)대화문화아카데미의 연구원이다. 전공분야는 빈곤, 사회불평등, 계급계층론이다. 관심 분야는 빈곤화 메커니즘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양상과 계급에 따라 사회적 혹은 환경 위험이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수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 학부대학 HP(honors program) 사업단의 연구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PAID)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시민공동체이고, 현재는 국내외 빈곤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 Study o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Poverty

Lee, Sung-min

Dae-Hwa Cultural Academy, Korea

Lee, Soo-Chul

Yonsei University,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concept of poverty. This study reviewed four controversial issues on the economic conceptualization of poverty, such as 1) absolute or relative poverty, 2) unit of measure and analytic unit, 3) income or expenditure, 4) various poverty indexes. Upon further review, it was determined that the concept of poverty has so far been studied mainly within economic context, based on income or consumption level. Thus, this study made three suggestions. First, the concept of poverty should be multidimensional. Second, researchers should consider the accumulative effects of poverty when conceptualizing. Third, the concept of poverty should be subdivided into several levels, like extreme poverty. This alternative concept of poverty can provide a stepping stone for elaborating researches on cause, process and effect of poverty.

[Key Words: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multidimensional poverty, accumulative poverty]

논문접수일: 2010년 11월 4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6일

제1저자(주저자): 이성민(Lee, Sung-Min)

소속 및 직위: (재)대화문화아카데미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73-6, 대화문화아카데미

전화번호: (02) 395-0781

이메일: jijina-1@hanmail.net

제2저자(교신저자): 이수철(Lee, Soo-Chul)

소속 및 직위: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PAID) 전문연구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

전화번호: (033) 760-2534

이메일: scbillee@hanmail.net